

나주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좌초 위기

범시민대책위 '5자간 합의 사항 수용 불가' 선언 후 탈퇴 난방공사 "손실보전방안 마련 안되면 과태료 물고 발전소 가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고행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이하 거버넌스)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5개 참여주체 중 하나인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최근 5자간 합의 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거버넌스를 탈퇴하면서다. 여기에 거버넌스 참여기관이자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난방공사 측도 오는 11월 30일 합의 시한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물더라도 SRF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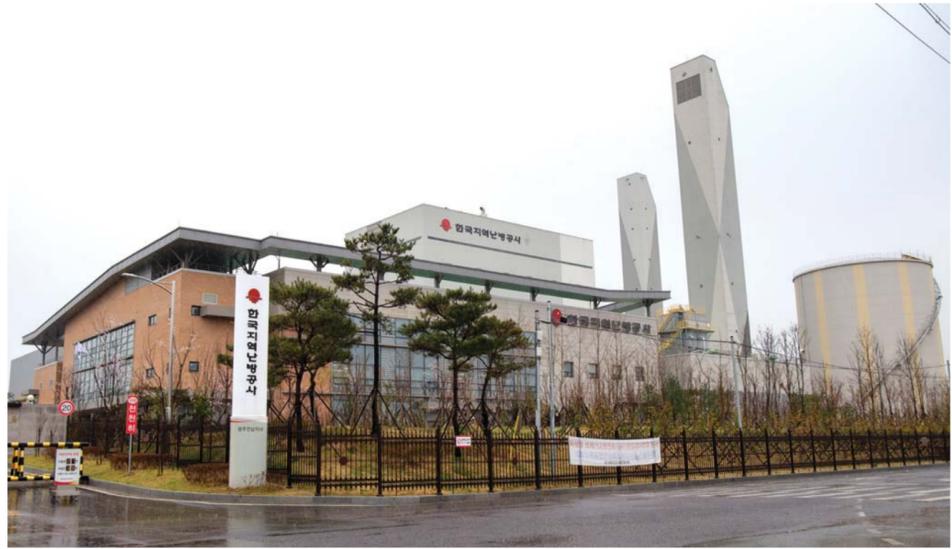
9월 26일, SRF발전소 가동 중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시민 참여형 환경 경향 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보전방안 등에 관해 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개별 부속 합의서 작성 시한을 1년으로 정했다. 기한 내 부속 합의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본 합의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되, 참여기관 합의를 거쳐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버넌스는 지난 1년간 기본합의서에 따라 환경영향 조사와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몰두했으나 손실보전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전문화적인 손실비용 발생으로 이를 상쇄할 만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방공사 측은 SRF 발전소 가동이 영구 중단될 경우 시설 매몰 비용, 발전 비용 상승에 따른 손실, 광주시와 순천-목포 등 전남지역 SRF 시설 폐쇄 비용 등 직간접 손실액이 최대 9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난방공사 측은 범대위 거버넌스 탈퇴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 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초 합의안대로 SRF발전소 가동에 들어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주민 반발, 거버넌스 조율 등을 이유로 시설 준공 이후 3년을 기다렸다. 나주시가 사업개시신고 수리를 거부

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감수하고라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범대위 또는 범대위를 대체하는 주민단체에 거버넌스 합류를 설득하면서 1개월여 남은 합의 시한까지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SRF발전소와 LNG발전소를 모두 갖추고 지난 2017년 준공됐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 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광주권 연료 반입 문제와 SRF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멈춰서 있다.

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거버넌스에 참여해온 범대위가 지난 달 29일 단체 해산을 결정하고 거버넌스 탈퇴를 선언했다. 범대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20차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에서 체결한 '부속 합의 의의 기간 연장 합의서' 내용을 놓고 내부 논란을 빚다 대표자 사퇴에 이어 단체 해산을 결정했다. 부속합의 의의 기간 연장 합의서에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SRF발전소 가동)난방공사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논란이 됐고, 현 단체를 유지할 경우 해당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위기감에 따라 단체 해산이 결정됐다. 또 범대위 측만 관계자는 전했다. 범대위 구성원들은 SRF발전소 가동 반대 운동을 이어갈 새로운 단체 조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고행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좌초위기를 맞았다. 사진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전남 대표 일자리 자리매김

512개 마을사업장 952명 근무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하는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가 전남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지난 2017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대표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국가사업으로 확대됐다. 이 사업은 청년의 경우 마을에 기반한

둔 기업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청년근로자가 배치된 마을기업들도 각종 지원에 따른 소득증대 혜택을 볼 수 있어 청년과 기업 모두 선호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근로자는 마을기업과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로 매월 230만원(숙박·교통비 30만원 포함)과 4대 보험료, 직무역량강화 교육비를 지원 받게 된다. 마을사업장은 시제품 제작지원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 사업화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512개 마을사업장에서 95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올해

12월까지 2년 근로계약이 종료될 청년 174명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3%인 13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도 추진됐다. 이 사업은 청년을 비영리법인·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 일 경험을 쌓아 역량을 강화시켜 민간 기업의 진입을 수월하게 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내일로 사업은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작해 올해 6월 종료된 1년 단위 사업

으로 참여자의 53.3%인 16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자 중 67명이 고용승계(41.9%) 됐으며 93명이 도내 타 기업으로 취업(58.1%)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블루이코노미를 연계한 신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또다시 전국 대표사업으로 발돋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블루 JOB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를 발굴했으며, 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블루 JOB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는 'DNA(Data, Network, AI)+US(Untact·Digital SOC) 기반형 일자리' 등 5개 사업으로 최대 2년간 총 18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공공기관 통합 채용방식 변경

하반기부터 필기 50% 이상 반영·면접위원 확대

광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방식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합격자 결정 방식 변경, 외부 면접위원 구성 비율 확대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필기 성적 50% 이상 반영 ▲면접위원 100여명→200~300명 확대 ▲외부위원 반영률 60~80% 확대 ▲면접위원 비밀 유지 서약 등이다. 시는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산하 공공기관 혁신 일환으로

통합 채용을 하고 있다. 광주시가 기관별 채용 수요를 파악하고 상·하반기 연 2회 동시 채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4개 기관이 참여해 127명을, 올해 상반기에는 16개 기관이 참여해 69명을 신규 임용했다. 박상백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 통합 채용 개선안이 채용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채용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인공지능 시제품 제작 67개 기업 선정

업체당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광주시는 "인공지능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67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에서 창업·스타트업 137곳이 공모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5000만~1억5000만원씩을 제작비로 지원한다. 시는 광주에서 새롭게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의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인력 양성,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신걸 광주시 인공지능정책과장은 "광주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창업과 관련 기업이 이전하고 지역 기업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올 '전기화물차' 448대 보급 환경개선 나서

오는 2023년까지 전기자동차 3만대 보급 계획을 수립한 전남도가 올해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448대를 보급해 대기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1676대(281억원), 전기화물차 448대(123억원), 전기이륜차 1042대(25억원) 등 총 3200여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기자동차

차와 충전기(6500대)를 공급하기 위해 전남도는 모두 477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전기화물차 구입 시 국고보조금 1800만원, 시군비 600~800만원이 지원되며, 도비는 시군비의 20%를 보조한다. 이에 따라 차량구매자들은 2520만원에서 27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급 대상지역은 여수, 순천, 광양 등 18개 시·군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환경관리부서 또는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호우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808억 확보

전남도가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80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결정했으며,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자치단체에 3125억원이 교부됐다. 전남에 이어 충북 487억원, 전북 472억

원, 강원 365억원, 충남 354억원, 경남 306억원, 경기 212억원, 광주 101억원 등 순이다. 전남도 교부액은 본청 337억원을 비롯해 시·군별로 구례군 176억원, 담양군 92억원, 화순군 50억원, 장성군 39억원, 곡성군 39억원, 나주시 37억원, 영광군 24억원 등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국 교부액의 26%에 달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